

# 여야, 내일부터 '국감대전'...세월호·서민증세 '혈투' 예고

### '민생국감·정책감사' 강조 불구 대상기관 늘고 준비기간 짧아 '국감무용론' 다시 부상 가능성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피감 기관은 늘었는데 세월호 특별법 여파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이 늦어져 실질적 준비기간은 옛세에 불과, 부실 감사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야는 '민생국감·정책감사'를 강조했지만 별다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년처럼 정쟁만 거듭함으로써 '국감 무용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운영세 원내대변인은 "아당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국정 혼란만 가중하고 정쟁에 매몰돼 국감 무용론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면서 "모법적인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처리한 준비로 정부 정책의 감시 기능에 충실하겠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서민증세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비롯한 사법부의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 국감은 상반기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의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월호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꼽히고 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관련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한 차례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조사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월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기로 한 만큼 이번 국감은 특별법 제정안 성안 과정에 여야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와 직결된 부처를 감사할 농림해양수

산위와 안전행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중 사망과 관련해 검·경의 부실 수사 문제를 따져볼 법제사법위도 격전장으로 떠오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증세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늦게 확정되면서 국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국감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월호 문제 철저 규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 수석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입법전쟁' 시작

### 주요법안 처리 싸고 충돌 불가피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의 '입법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후폭풍으로 그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화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주요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수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청와대가 필수 법안으로 지목한 30여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현격해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서민 경제를 살릴 필수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경제 활성화 법안 대부분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진짜 민생법안' 30여개를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여야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제 인상 방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할 분위기가 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이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고 역력한 지방재정 보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지방세 및 일부 국제 인상 추진안을 '부자 감세'를 통해 생긴 재정 적자를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주요 선거가 없는 지금이 해묵은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할 '적기'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무작정 반대보다는 정치권과 정부, 이해 당사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범주류' 우윤근이나 '중도파' 이종걸이나

###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 2파전 압축...오늘 '추대 vs 경선' 입장 정리할 듯

새정치민주연합 후임 원내대표 경선이 '범주류' 지원을 받고 있는 우윤근 의원과 '중도파'가 미는 이종걸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우선 친노계를 포함한 범주류 쪽은 오는 9일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단독 후보로 추대하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정세균계 최재성 의원은 5일 트위터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때는 유인태 의원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출장길에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정책위의장인 우윤근 의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범주류는 특히 복수의 후보가 경선을 벌인다면 당내 싸움이 격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 의장 추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파에서는 이런 추대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뜰이나 비대위 구성에서 중도파가 배제됐으니,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되는 원내대표직은 중도파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도파의 지지자 등에 업고 나설 후보로는 4선의 이종걸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그는 범주류 측의 추대론에 대해서는 "지금의 비대위를 두고도 한쪽으

로 기울어졌다는 의견이 많은데, 여기서 추대 분위

기를 몰아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비해 보더라도 경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주승용 의원도 중도파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주의원은 "계파별로 갈라져 표 계산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선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중도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집결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6일 오전 회동을 갖기로 해,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보선과 관련한 중도파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 연구원의 부원장에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박사와 '스타감사' 출신인 이범 교육평론가를 영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권은희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해야"

### 공군참모총장과 간담회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울) 의원은 지난 2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 8331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무등산에 있는 공군 방공포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니며 공주시 등 10만 8147㎡를 1966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지역민들의 높은 환원 열망이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에 자료요구를 한 결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없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



의 장을 만들어 이전방식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2011년에 작전성 검토를 진행한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실적으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이전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고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땅이 아닌 곳에 준다고 있는 무등산 방공포대의 경우, 부대이전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NAVER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죽아와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5층 참조은인화 4층 한길통증의학과 3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010-2007-8848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b>01 부동산 담보대출</b> 최저 3.5%~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내차지, 전·답, 모빌 대출한도: 최고 80% (비대출금) 이하 상환방식: 원금·이자·원금·원금 상환기간: 1년 이상 (10년 이상 가능)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호본 각 1통, 인감도장, 신원증	<b>02 햇살론대출</b>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상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자격: 신용등급 4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최소 저당비율 및 근저당 대출한도: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상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기간: 연 8.01% (연리율) 이하 보통: 대출금의 0.95% (가정용), 0.90% (근로자)	<b>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b>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최저 4.0%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상환방식: 원금·이자 (비이자대출 가능)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호본 각 1통, 인감도장, 신원증	<b>04 자영업자, 직영업, 직영업 전문직을 위한 신용대출</b>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자격: 자영업자 및 직영업, 전문직 대출한도: 최고 1억원 대출금리: 최저 5.0%~ 대출기간: 최장 5년 특약: 대용 대출자 금리 추가 인하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MG금남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수시 입출금 통장: 최대 2.5% (다. 하루를 넘겨도 일전예금 (금액에 따라 적용))  
정기적금: 1년 3.1%, 2년 3.2%, 3년 3.3%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